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15대 대통령 선거 나흘 뒤인 지난 1997년 12월 22일.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 5·18 유혈 진압,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전두환·노태우를 포함한 19명의 인사가 일제히 석방된다. 정부의 특별 사면 덕분이었다. 국민의 5·18 진상 규명 요구와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이태 전 구속수감된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무기 징역에 벌금 2205억 원 추징으로 감형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한 점을 들어 '항장 불살' (降將不殺: 항복한 정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는 고사까지 동원해 형을 한 단계 낮췄다.

이러진 특사는 당시 임기 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당선자의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명분은 국민 대화합이었다. 여론은 냉담했지만 초유의 '외환 위기' 속에서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특사에 적극적이었다. 신한국당은 형 집행이 재확정되기도 전에 사면론에 군불을 지폈다. 급기야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는 전·노 사면을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전 씨는 2년여 만에 출옥해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전 씨의 특사에는 5·18의 최대 피해자였던 5월 단체와 광주 재야 원로들도 힘을 보탰다. 5·18유족회와 부상자

성급했던 특사, 일그러진 정의

회, 구속자회, 조비오 신부 등은 사면 사흘 전 성명을 통해 "5·18의 올바른 해결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전·노·의 사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광주일보 1997년 12월 20일자 23면> 사상 첫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룬 낸 호남 출신 김대중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 주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호남이 대응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그것은 일방적 용서이자 화해였다.

물론 반대와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다. 당사자들의 진정성 참회나 사과가 없었고 국민적 사죄 합의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후퇴이자 사법 정의를 퇴색시키는 조치라는 비판도 거셌다. 그럼에도 '조건 없는 사면'은 단행됐다. 다분히 정치적 산물이었다.

참회·사과 없는 일방적 사면

전 씨 등의 특사 과정을 지금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5·18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 폄해, 비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석방 이후 광주 시민들은 "죄 자제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그들의 진술한 반성과 사죄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탄판이었다. 참회는커녕 과거 판결이나 국회 청문회, 군(軍)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고 5·18을 능욕하는 궤변을 연속번죽 쏟아 냈다.

출소 당일 취재진에게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며 망망한 모습을 과시한 것은 그 전조예 불과같다. 2003년 추징금 관련 재판에서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뻔뻔스레 납부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155억 원이다.)

급기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부르대는 하하면 자신이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며 연구력을 부렸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자신의 특별사면을 도와준 조 신부를 비롯한 광주 시민들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되레 곡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떠 자서전에서 자신들이 5·18의 희생자라고 강변했고,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재판부는 5월 단체가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한 69개 표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재판 관할 이송 신청을 반복하더니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그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당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人君所畏者, 史而已)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의 한 대목이다. 재위 12년 동안 두 번의 사회를 일으키고 폭정을 일삼다가 조선 최초의 반정(反正)으로 폐위된 연산군도 사관(史官)들의 평가는 늘 두려워했다고 한다.

전 씨는 역사조차 두렵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너무 두려워 다시 한 번 '역사 쿠데타'를 꾀하는 것일까. 신군부 세력은 집권 이후 '80위원회' '511대책반' 등

을 만들어 자신들의 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실을 조작했다. 발포 명령자 등 핵심 의혹들이 여태껏 규명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지만원 씨의 5·18 망언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사회 곳곳에 곤란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일 잔재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월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극우 세력의 준동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죄에 합당한 준엄한 처벌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비극적 미래를 막으려면 조만간 출범할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성범죄 등에 대한 치밀한 재조사를 통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국가의 공인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5·18 왜곡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가짜 뉴스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법률 제정도 서둘러야겠다.

전 씨의 잇단 재판 불출석에 광주지법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음달 11일 광주 법정에 서야 하는 전 씨는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4년 만에 다시 법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심히 어려우니 법으로써 단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법과 역사를 시험하는 자에게는 법과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기를 보여 주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은편칼럼



이병우 단국대학교 외래교수

내가 골프를 할 때, 잘 나가는 상대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적인 평정 상태를 깨뜨리면 됩니다. 한때 거론됐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참 발전했지요?" 이 말을 하면 70% 정도는 바르르 땀다가 헛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더 센 강도로 약을 올립니다. "다음 대통령은 유시민이 유력하지요?" 남아 있는 30% 중 20%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현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6년 1월 '한겨레 21'에 실린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소주'

으로 내정됐을 때인데 당시 세간의 평은 '뚝뚝한 괴물'로 여겨졌고 "다음 대통령은 유시민이 유력하다"는 농담은 뺨에 가깝다고 적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상전벽해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언급해도 여론조사 결과는 유력 대권주자 상위에 올라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유시민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사외 이사로 있는 B양 조는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주가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 작가가 사외 이사를 할 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도 말입니다.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지만 여권 채널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히려 흥준표의 '홍카콜라' 채널이 인기를 더 끌었지요. 하지만 유시민의 '알릴레오 TV'가 나가자 단번에 정치권 유튜브를 석권했습니다.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B양조의 소주 모델로 유시민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유 작가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필자도 이 광고를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웬만한선 광고 출연을 하지 않는 유시민 작가가 모델로 등장해서 놀랐고, 모델 포즈가 여느 연예인 포즈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또 놀랐습니다. 소주병 상표에까지 등장한 유시민 작가, '이 술은 좋은 거니 가 한번 마셔봐' 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광고 모델로 등장해도 좀 '본대 나게' 그려질 줄 알았는데 광고만 봐서는 '연예인'의 포즈였습니다.

유 작가는 광고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적극 PR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방송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년 기념주가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소주가 되길 기원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은 전라도가 정도 천

년을 계기로 재조명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광고 모델로 등장한 첫 사례는 박찬종 전 의원입니다. 1993년 N유업의 우유 광고에 출연했는데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물이 특정 기업의 제품 광고에 등장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고 슬로건이 '무균질' 우유였는데 박찬종의 이미지와 잘 연결되어 자신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소주의 효과는 어떻게요? 안타깝게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듯합니다. 사실 광고만 잘한다고 제품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때 '짜가지 없는 괴물'로 지적받았던 유시민 작가의 이미지가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부상할지 누가 예상했을까요? "정치는 생물이야"라고 하는데 브랜드 이미지야말로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광주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 시급하다



강현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회장

안전이란 위협에서 오는 사망이나 상해, 질병 혹은 재산상의 손실 등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상태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화두로 특히 건축계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대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마우나 리조트 붕괴와 같은

해 4월 은 국민을 놀라게 한 아산 신축 오피스텔 기울어짐 사고 등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실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빚발쳤다. 이에 정부는 안전 강화 TF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사고들이 설계·시공·감리상의 문제로 확인되자 국회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계와 감리 분리 시행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6년 8월 4일 시행을 확정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 건축계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민 생명과 재산의 보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법안을 소망해 왔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된 후야야 대책이 마련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이다.

이후에도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같은 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

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안전 점검에 문제가 부각됐다. 또한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등 크고 작은 건축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과 관련 단체는 건축물 안전 대책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4월부터 지자체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설계 도서와 구조 계산서, 사용 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지원하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시행됐다. 건축계는 향후 지자체별 추진 방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신설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나섰다. 14개 자치구는 올해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는 대구건축사회와 협의하여 2016년 7월 '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

제도'를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 계획과 구조 및 생활 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 예방 등 5개 분야 122개 항목에 대한 설계 도서의 합리성을 80여 명으로 구성된 건축 전문가들이 로테이션으로 선발돼 점검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12일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17개 시·도 건축사회 회장들은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설립을 위해 연내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고용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진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社說

국회 윤리위 징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광주 폭동', '5·18 유공자 괴물 집단' 같은 해당 망언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잇그제 '5·18 망언'의 주역 3인방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불발된 이후 불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망언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고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까지 포함하자고 해 합의가 결렬된 것이다. 징계안 상정이 불발된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상대방 때문에 결렬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그렇지 않아도 등장 대우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모두

26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지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징계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5·18 망언' 징계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당리당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 징계'를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다른 사안과 뒤섞음으로써 몰타기를 하고 본질을 숨기는 꼼수를 더 이상 부러서는 안 된다.

여당인 민주당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26건을 모두 상정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심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어찌 됐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망언이 이 땅에서 다시는 허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 시대 노인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 2001년 36만 2156명에서 지난해 298만 6676명으로 늘어 전체 운전자의 9%에 이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2016년 17만 1804명에서 지난해에는 20만 506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75세 이상도 5만 306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역시 2016년 2527건에서 지난해에는 301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되레 늘고 있다. 이처럼 노인 교통사고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광주·전

남에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429명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또한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인지 능력 진단이 포함된 두 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이 필수로 바뀌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나주의 전남면허시험장과 광양면허시험장 두 곳뿐으로, 그나마 오는 4월까지 예약이 완료돼 고령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신체 반응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높다. 그렇다고 운전대를 잡은 노인들을 짜깁기 요주의 대상으로 취급하면 그 역시 차별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선진국에선 시행하고 있는 노인 전용 자동차 번호판 도입을 비롯해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안전교육장 확충 등 지자체와 경찰의 세심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 지식인 로저 스크러튼은 보수주의에 대해 '모든 성숙한 사람들이 선택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정의했다. 자신의 저서 '합리적인 보수를 찾습니다'에서 인간에게 공동 자선으로 주어지는 훌륭한 유산, 즉 평화와 자유, 공정한 법, 민주적 절차, 공손함, 공공성, 재산·가정생활의 보장 등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수의 가치로 꼽았다. 특히 보수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가치를 고수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보수의 가치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가치는 국가주 의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사실상 보수 정당의 도구로 전락되어왔다. 보수의 가치보다는 '진보'라는 반대 진영과의 비교를 통해 정당 기록권을 위한 현상 유지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수구 꼰대' '진보는 좌빨'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그동안 뒤흔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지난해 6·13 지방 선거 패배를 경험한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은 보수에 대한 가치 성찰은 뒷전인 채 여전히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이용된 기록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니, 최근에는 아예 극우(極右)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듯하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5·18 역사를 폄해하는 망언을 퍼부은 일부 인사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후보 연설회장을 '태극기 부대' 가장 악하고, 일부 후보는 '적화 통일', 김정은 노예 "총복 주사파 탄핵" 등의 발언을 일삼고 있다.

보수의 본질은 자유주의다. 자유와 민주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추구하고 공정한 규칙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보수 정당의 한 의원은 "끊임없는 보수 혁신과 개혁을 통한 외연 확대도 모자랄 판에 역사 퇴행적 급진 우경화 현상은 보수 수순을 깨는 보수 환멸을 조장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발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변화시킬 정당다운 거스나 길 바란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문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541)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